나는 신종플루, 더딘 예방접종

대유행 속 효과 반감 우려 … 고3·교도소 수용자·장애인 '비상'

초·중·고 11월 중순께 접종 가능

광주·전남지역에서 신종플루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은 더디게 진행돼 '백신 효과 반감'에 따른 신종플루 대유행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초·중·고의 경우 11월 중순께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데다 고위험군의 비중이 높은 교도소 등에 대한 백신 확보 작업이 답보 상태여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타미플루 접종은 12일 후인 11월 16일께 시작된다. 전국 초·중·고생의 접종 물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데다 학부모 동의와 예진용 설문지 작성 및 회수에 3주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미 확보된 백신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해야한다며 조속한 접종을 요구하고 있다. 접종시기가 감염의 1차 정점을 놓칠 경우 백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학생들에 대한 접종 시기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1월 12일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과 일선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또 9세 미만의 아동과 영유아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접종을 해야함에도 아직까지 접종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아 부모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9세 미만은 두 차례에 걸친 임상시험 접종이 끝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백신을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접종 시기가 11월 말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9세 미만에 대해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않고 1차 접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접종 시기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광주교도소 등 전국 47개 교도소와 구치소의 수용자 중 고혈압과 당뇨 등 신종플루 고위험군은 1만1천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수용자(4만9천200여명)의 22%에 이르지만, 당국은 백신 확보 등 대책 마련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법무부가 확보한 타미플루는 수용자의 4.4%(2천185명) 수준이어서 신종플루 대란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아울러 전국 교정시설에는 수용자 외에도 교정공무원 1만5천명, 경비교도대원 1천800명 등 6만7천여명이 생활하고 있어 신속한 타미플루 확보 작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보건부는 정신지체아 등 신경계 질환 장애아동이 다니는 특수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신경계 질환을 앓아온 이들이 최근 잇따라 사망한 데 따른 조치로, 이르면 31일께 우선 접종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여대 '사랑의 연탄' 배달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직원과 학생 등 30명이 28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의 독거노인 등 불우이웃 16가구에 연탄(4천장)을 전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용산참사' 농성자 징역 5~6년 중형

서울중앙지법 "전원 유죄"

'용산참사' 당시 화재를 일으켜 경찰관 등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9명 중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김모씨 등 5명에 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아무리 절박해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것은 국가 법질서의 근본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치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첫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제식 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42)씨에 대해 집시법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반 교통 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내년 7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해당 조항이 위헌이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집시법 조항에 한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딱 걸린' 얌체 공무원들

저소득층·노인 지원 의료비 수년간 4천400여만원 '꿀꺽'

무안군 공무원 고발

무안군 공무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저소득층과 노인 등에게 지원해주는 의료비 일부를 수년간 횡령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나 경찰에 고발됐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의 무안군청 감사에서 몽탄면 보건지소 7급 공무원 A(여·44)씨가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21차례에 걸쳐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원되는 '의료세비'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건강보험공단의 인증아이디를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의료세비 중 일부만을 군 보건소에 입금하는 형식으로 공금을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안군은 지난 8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횡령사실을 확인해 감사원에 보고하고 무안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전액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오락실 업주 비호 '허위 공문서'

경찰 3명에 벌금형

불법 오락실 단속과정에서 업주를 비호하고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현태)는 28일 오락실 단속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후배에게 허위공문서를 쓰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교사)로 기소된 김모(53)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경사의 부탁을 받고 공문서를 허위로 쓴 혐위(허위공문서 작성)로 기소된 이모(37)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김모(40) 경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경사가 처남이 운영하는 불법오락실을 비호하기 위해 후배 경찰관들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 경사는 지난 2007년 7월 처남이 운영하는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오락실이 단속되자 이 경사 등에게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이 경사 등은 게임기 대수를 축소하는 등 조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인쇄물 제작 사업권 금품·향응"

북부경찰, 내사 착수

광주에서 인쇄물 납품 중개업자가 인쇄물 제작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광주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인쇄 중개업자 A(57)씨가 광주의 모 구청 사업에 필요한 인쇄물을 특정 업체가 제작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사무실과 은행계좌를 압수수색했으며 관련 공무원들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구청 관계자는 "직원 2명이 최근 조사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참 〈7939〉 김종두

가족묘지 불 80대 노인 숨져

지난 27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야산에서 임모(여·80)씨가 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임씨가 가족묘지에 난 불을 끄려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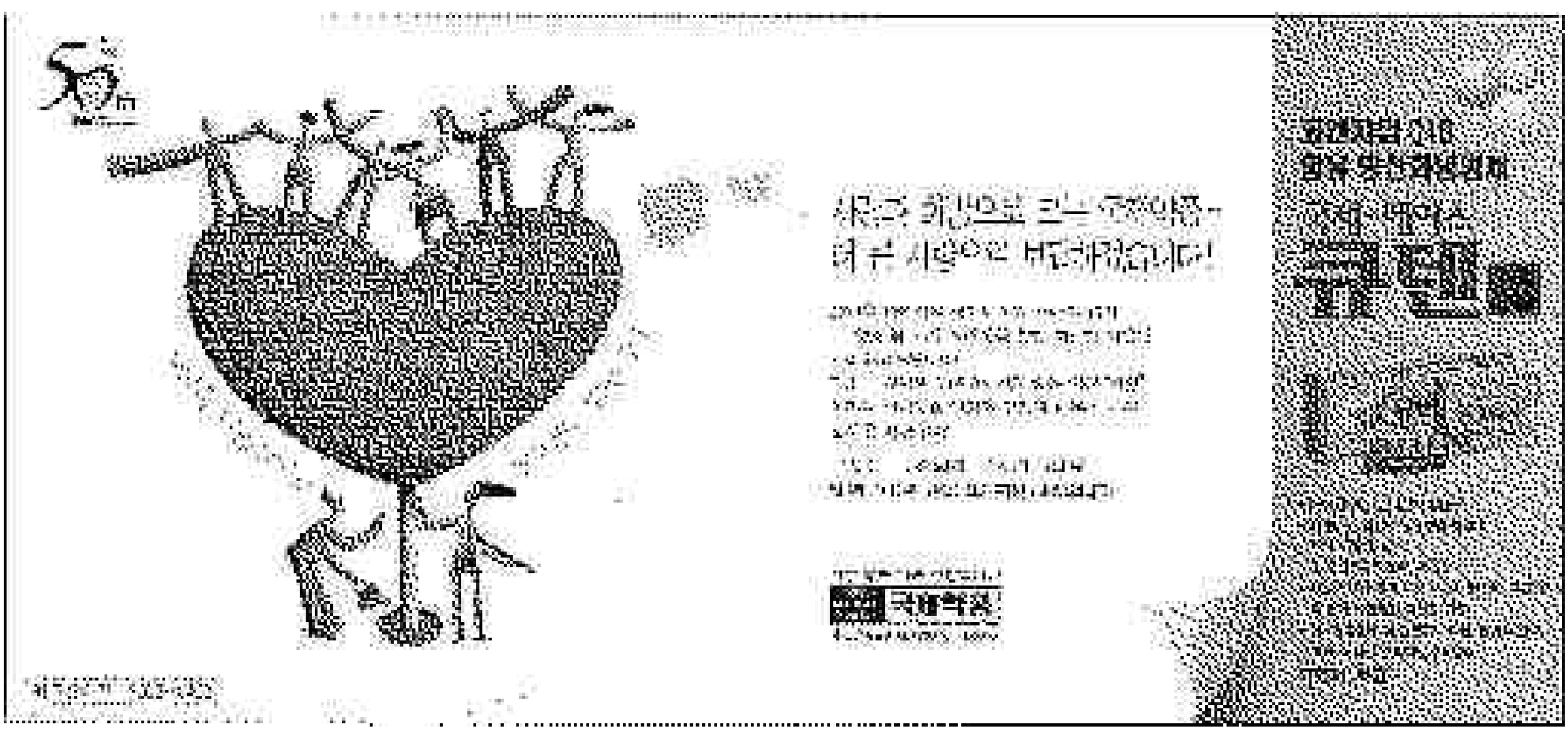
형수·시동생이 위장 국제결혼 알선

쌍나팔

○…위장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돈을 받아챙긴 형수와 시동생 등 국제결혼 브로커들이 경찰서행.

○…전남지방경찰청 외사계는 28일 최모(55)씨와 모모(여·58)씨 등 브로커 4명과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한국인 남성 3명 등 7명을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검거.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형수인 모씨 등과 함께 지난 1~5월 외국인 학생에게 국내 대학을 소개하는 유학원을 차려놓고,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 3명을 한국 남성과 위장결혼시키는 대가로 2천400만원을 받은 혐의.

○…경찰은 이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학에 소개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